

# 1919년 그날처럼...태극기 흔들며 “대한독립만세”

## 광주 고려인마을, 3·1운동 107주년 기념행사

### 월곡동 골목 500m 행진...일본 헌병 저지 장면 재현 독립선언서 울림 되새겨...“고려인도 독립운동 주역”

“함판 함성으로 일본군을 물리칩시다. 코리아 우라(대한민국 만세).”

3·1운동 107주년인 지난 1일 오후 1시 30분, 광주 광산구 월곡동 월곡고려인문화관 ‘결’ 앞 골목은 107년 전 그날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검정 저고리와 두루마기를 차려입은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박군택 국회의원, 신조아 고려인마을 대표, 이천영 고려인마을 역사를 비롯해 고려인 동포와 주민, 학생 등 200여명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골목을 가득 메웠다.

이들의 표정에는 비장함과 자부심이 교차했다.

이들은 손에 태극기를 들고 ‘코리아 우라’, ‘대한독립 만세’를 우렁차게 외치며 월곡고려인문화관 ‘결’을 출발해 바람개비지역아동센터, 고려인종합지원센터를 거쳐 다모아어린이공원까지 500m를 행진했다.

행진 도중 일본 헌병 복장을 한 이들이 모형 소총을 들고 만세 시위를 저지하는 장면도 재연했다.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 참여자들은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위협에 맞섰다.

한 어린이가 “왜 누구는 만세를 부르고, 누구는 총을 가지고 위협하냐?”고 묻

자, 아버지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바라는 평화적 시민운동이다’고 답하며 태극기를 연신 흔들었다. 현장은 단순한 재연을 넘어 세대 간 역사교육의 장이 됐다.

다모아어린이공원에 도착하자 ‘빼앗긴 조국, 그날의 함성’을 주제로 107주년 기념행사가 거행됐다.

행사는 국민예배,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추모 공연, 기미독립선언서 낭독, 추념식, 3·1절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의 하이라이프는 기미독립선언서 낭독이었다.

고려인 후손인 전남대학교 대학생 덴마리나씨(24·여)와 호남대학교 김윤라씨(23·여)는 “조선인이 자주적 민족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반만년 역사의 뿌리 내린 민족의 권위에 의지해 이를 선언하며 2000만 민중의 총성과 정성을 모아 이를 널리 밝히며, 민족이 자유롭게 발전하기를 바라며 이를 주장한다”고 낭독했다. 참여자들은 선언서 내용에 공감하며 3·1운동 정신을 되새겼다.

고려인마을어린이합창단이 준비한 추모 공연에서는 ‘나의 살던 고향은’, ‘여우야 여우야 뛰어나’가 울려 퍼지며 분위기를 따뜻하게 물들였다.



‘빼앗긴 조국, 그날의 함성’을 주제로 지난 1일 광주 광산구 고려인마을 일원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에서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고려인마을 주민들이 3·1만세운동을 재현하며 거리행진을 펼치고 있다.

김블라디미르 시인이 ‘일본 침략자와 투쟁한 날’이라는 추념시를 읊었고, 고려인들은 한 구절씩 들을 때마다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공감했다.

공원에 자리한 흥분도 장군 흉상 앞에서 항일무장투쟁의 역사를 되새기는 발걸음을 이어졌다. 한 참가자는 흉상 앞에서 그의 업적을 찬찬히 살폈다.

오재운 학생(대성여고 2년·18)은 “고려인, 고려인마을에 대해 알고 싶어 친구 3명과 함께 기념식을 찾았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 놀랐다”며 “3·1운동에 고려인도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

명을 밝혔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고려인마을 관계자들이 주민들에게 고려인 전통 빵 ‘리보시카’를 나눠주며 음식문화와 소개했다. 방문객들은 낯설지만 정겨운 맛을 나누며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세계적인 고려인 미술 거장 문빅토르 화백의 전시실도 문을 열었다. 전시실에는 흥분도 장군 초상을 비롯해 고려인의 삶을 재해석한 아크릴화와 동화 삽화 등 50여 점이 걸렸다. 관람객들은 작품을 통해 강제 이주의 역사를 딛고 살아가는 고려인들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는 시

간을 가졌다. 신조아 고려인마을 대표는 “고려인들은 한국인과 같은 조상을 둔 한 핏줄이다. 한민족의 자랑스러운 얼을 이어받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지역 주민과 함께 3·1 만세운동을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려인 선조들은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식량과 자금을 지원하며 항일운동에 나섰다”며 “우리의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 만세운동 기념식을 해마다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 오늘의 날씨

맑음 07:01 / 달맞이꽃 18:29  
맑음 18:18 / 달맞이꽃 06:48



광주	4~15
목포	4~11
여수	6~12
순천	5~13
구례	4~15
광주	3~13
신도	5~14
흑산도	4~9
고흥	5~13
진도	4~11

목포	미물(구)	01:58 / 14:37
	샘물(재)	07:17 / 19:48
여수	미물(구)	09:23 / 21:34
	샘물(재)	02:55 / 15:23

### 지문 흔적으로 빈집 털어

마넨필

광주 북구의 한 빌라에서 이웃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유추해 침입, 귀금속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

2일 북부 경찰에 따르면 주거침입범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2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 30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한 빌라에서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금반지 2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아, 조사 결과 A씨는 현관 도어락에 남아 있는 지문 자국을 토대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문을 열고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을 수색하던 중 A씨가 현장 인근에서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며 자수.

이후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경진 기자 looks@

## 강제동원 생존 434명...10명 중 4명 100세 넘어

### 의료지원금 지급 기준...광주 14명·전남 39명 해마다 급감...역사 기록·의료 생활지원 절실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 생존자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100세를 넘긴 초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자 수는 해마다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어 국가 차원의 기록 보존과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정부로부터 의료지원금을 지급받는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는 434명(남성 376명·여성 58명)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생존자들에게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 현황을 토대로 생존자 수를 추산해 발표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100세 이상이 179명으로 전체의 41.2%를 차지했다. 이어 96~99세 224명, 91~95세 29명, 90세 이하 2명으로, 대부분이 90대 이상 고령층에 집중됐다. 최연소 생존자는 85세(1941년생), 최고령자는 106세(1920년생)로 파악됐다.

생존자 수는 최근 10년 새 급감했다.



양금덕 할머니(왼쪽) 정신영 할머니(오른쪽)

2015년 9938명으로 1만명 아래로 떨어진 이후 2020년 3140명, 2021년 2400명, 2022년 1815명, 2023년 1264명으로 감소했다. 2024년에는 904명으로 1000명 선이 무너졌고, 지난해에는 64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82명으로 가장 많았

고, 서울·전북 각 48명, 충남 42명, 전남 39명, 경남 38명, 경북 31명 순이었다. 부산·인천 각 15명, 광주·강원 각 14명, 대전 11명, 울산 2명, 세종·제주 각 1명 등이다.

광주·전남 지역 역사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대부분이 90대 이상으로, 의료·돌봄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광주에 거주하는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양금덕 할머니(97)는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서훈(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양 할머니는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로 동원돼 일본에서 강제노역을 겪은 뒤 수십 년간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 왔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실을 증언하며 역사적 책임을 묻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 다른 피해 생존자인 정신영 할머니(96) 역시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동원돼 혹독한 노동을 겪은 뒤 귀국했다. 이후 오랜 세월 침묵 속에 살아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하며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촉구해 왔다.

최근에는 나고야 메이난 후루야이병원 주차장에서 열린 도난카기 대지진 희생자 추모식에 참석, 오랜 세월 마음속에 묻어 둔 친구들의 이름을 다시 확인하며 그들의 닳을 기렸다.

정 할머니는 14세였던 1944년 5월 나고야항공기제작소로 징용돼 강제노역을 하다가 같은 해 12월 발생한 도난카기 지진으로 친구들을 잃었다.

지역 시민사회는 두 할머니의 증언이 강제동원 피해의 실상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라고 평가한다.

이국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생존자 대부분이 100세 안팎의 초고령자인 만큼 실질적인 의료·생활 지원과 함께 구술 채록 등 역사 기록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며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주거복지+마을재생’ 동구, 생활 안전망 구축

### 노후주택 단열·방수 등 개선...주민 만족·도시 미관↑

광주 동구가 노후주택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 집수리 시범사업을 통해 93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단순한 시설 보수를 넘어 주거복지와 마을재생을 결합한 ‘생활권 단위 주거안전망’ 구축에 나선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일 동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산수동 친환경자원순환센터와 산수2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등 고령층 거주 비율이 높고 노후주택이 밀집된 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열악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 안전 분야를 우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2차 시범사업에는 전체 747가구 가운데 404가구가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동구는 노후도와 실거주 기간, 연령, 소득수준 등을 반영한 정량평가와 집수리 전문가의 현장조사, 주거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93가구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 가구에는 단열, 창호 교체, 방수,

도장, 대문 교체 등 주택 성능 개선 공사가 이뤄졌다. 특히 단열과 방수 등 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공정을 우선 적용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누수 피해 예방 효과를 높였다.

동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상담소 운영, 통장단 방문 홍보, 집수리 전문관 배치 등 맞춤형 행정지원도 병행했다. 공사 완료 후에는 준공 점검과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다음 사업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도 구축했다.

구는 1·2차 사업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토대로 3차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3차 사업 모집은 3월 6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산수동 친환경자원순환센터와 산수2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노후주택이며, 공사비의 50~100% 범위에서 주택 유형별 최대 한도 내 지원한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영광 해상풍력 배당 ‘가짜 어민’ 논란 확산

### 피해 인정 460만원·일반 군민 27만원...17배 격차 1500명 집회...조업 검증·외부감사 도입 등 촉구

전남 영광군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둘러싸고 ‘가짜 어민’ 논란이 불거지자 주민들이 공청하고 투명한 이익 배분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 영광군 군민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군청 앞에서 ‘해상풍력 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을 촉구하는 군민 집회’를 열었다. 추최 측 추산 1500명이 참석한 이번 집회는 실제 조업을 하지 않으면서 지원금을 노리고 어업인으로 등록한 이른바 ‘가짜 어민’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한 행정 당국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영광 인근 해역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는 17개 발전사업자가 총 11G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단열 지역 기준 전국 최대 규모로, 이 중 8개 업체가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각업체의 핵심은 피해 조사와 지원금 산정 방식이다. 주민참여 제도에 따라 ‘피해 어업인’으로 인정되면 향후 이익공유 수익으로 1인당 약 460만원이 돌아가지만, 일반 군민 배당금은 약 27만원 수준에 그쳐 17배 가까운 차이가 발생한다.

연합회 측은 “이 같은 구조를 악용해 조업 일수를 허위로 부풀리거나 실제 없는 맨손어업을 신고하는 사례가 최근 폭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조사 결과 지난해까지 영광 맨손어업 등록 누적 인원은 4016명이었으며, 올해는 두 달 만에 250명이 세

로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어선 등록 대수도 2024년 865대, 지난해 895대, 올해 2월 현재 926대로 꾸준히 증가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어업인 판단 및 피해 인정 기준 전면 공개 △조업 일수 등 객관적 자료 기반 검증 △외부 감사 또는 주민참여 검증위원회 구성 △허위 신고 적발 시 환수 및 제재 규정 마련 등을 요구했다.

김선영 연합회 수석회장은 “군이 직접 나서 제도 악용을 차단하고 투명한 검증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광군 관계자는 “최근 어선과 맨손어업 등록 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보상 절차는 민간 업체 주도로 진행돼 행정이 직접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98@

## 서구, 화정 A척추병원 허가 취소 법령 등 검토...6월부터 운영 불가

광주 서구가 화정동 소재 한 척추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2일 서구에 따르면 이번 처분은 해당 병원의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에 따른 것이다.

해당 병원은 2017~2018년 근무했던 의사가 수술 병행 등을 간호조무사에게 맡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13일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병원은 개설자가 변경된 상태인데, 서구는 당사자들이 병원에서 손을 뗐어도 법인 성격인 병원 측에 행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에 대해 복지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개설자를 변경한 것과 관계없이 행정처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회신했다.

서구는 복지부의 입장과 지난달 11일 병원 측의 소명 및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서구의 개설허가 취소 처분에 따라 해당 병원은 6월 1일부터 법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됐다. 송태영 기자 sty1235@